

‘공백 찾기’류 문항 설계의 핵심은 ‘밑줄 내에서 무엇이 그 의미를 밑줄의 내용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입니다. 밑줄 내에서 어떤 개념어가 그 자체로는 미지의 대상이라면 그것의 개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어떠한 과정이 미지의 대상이라면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어떠한 기준이 미지의 대상이라면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들을 채워주는 설명은 지문의 다른 곳에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를 찾아서 다시 밑줄에다가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예시들을 통해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37-42 세트 6-7문단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 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번 문항)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명시적인 연결점(지시 표현이나 접속사 등)의 영향이 큰 공백

‘㉠말랑말랑한 법’에서 ‘말랑말랑’이라는 개념이 이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랑말랑’의 개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현실’이라는 명시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이 ‘말랑말랑’의 의미 설명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정리하면 ‘국제 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목적을 세우고 지문을 읽으면 됩니다.

‘국제 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한다’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적어놓고 글을 읽다 보면 6문단에서 해당 공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국제 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는 국제 기구인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이며,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한다’는 것은 ‘기준을 받아들여 시행하며 법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담고 있는 것은 ‘㉤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입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12-17 세트 (나) 3문단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번 문항)

- ①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②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
- ③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감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④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 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연결점(지시 표현이나 접속사 등)의 영향이 큰 공백

15번 문항은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가 성립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공백은 ‘지각과 감각의 개념이 무엇이길래 서로 구분되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따라서’라는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자연스레 그 공백을 채워주는 설명입니다.

3문단의 처음부터 ‘지각’의 개념이 예시와 함께 설명되면서 공백이 채워집니다.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입니다. 그럼 얽힘의 체험이 무슨 말이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것’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란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의 공존이며 그렇기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답은 ‘②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입니다.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4-9 세트 (가) 3문단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3.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번 문항)

- ①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 ②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③ SF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 ④ SF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 ⑤ SF는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면모에 주목하게 한다.

명시적인 연결점(지시 표현이나 접속사 등)의 영향이 큰 공백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에서 그 자체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역사화’입니다. 정확히는 ‘역사화’의 개념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백이자 목표는 ‘역사화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밑줄의 바로 앞에 ‘이러한’이라는 연결점이 있기에 공백에 대한 설명이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백에 주목하여 지문을 읽다 보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민감하게 읽어야겠죠? 그리하여 ‘역사화’란 ‘사회를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를 ‘미래를 다룬 SF’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이를 담고 있는 답은 ‘②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입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4-9 세트 (나) 3문단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4.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7번 문항)

-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연결점(지시 표현이나 접속사 등)의 영향이 큰 공백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라는 밑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밑줄의 바로 앞에 ‘예컨대’라는 연결점이 있고, 이로 인해 밑줄은 계약 우선 적용의 기준이 적용된 예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의 문장에서 공백을 찾으면 두 가지의 기준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의 소멸’, ‘보호의 필요가 없을 만큼의 임차인의 충분한 경제력’입니다. 밑줄의 내용이 뭐였죠?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가 전제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밑줄은 전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의 소멸’에 해당하며 이것을 유일하게 담고 있는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가 답이 됩니다.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17-19 세트 1문단 및 4문단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는 반도체 소자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줄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이다. ……………1문단

한편,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하게 마스크에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4문단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번 문항)

- ①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 ②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③ 빛을 사용하지 않고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의 발명을 위해
- ④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
- ⑤ 반도체 소자 생산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밑줄과 주변 맥락을 통한 목적 설계가 중요한 공백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이라는 밑줄 앞의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밑줄의 의미 형성에 큰 영향을 주죠? 따라서 이 부분까지 합하여 공백을 규정한다면, ‘패턴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백으로 설정하고 1문단을 읽게 되면 두 번째 문장에서 공백을 채워주는 설명이 바로 등장합니다. ‘패턴의 크기를 줄여서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가 그것이죠. 따라서 답은 이를 담고 있는 ‘②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입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31-34 세트 1, 2, 3, 4문단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지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840년대에 줄(Joule)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calorie)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 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6. 윗글로 볼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2번 문항)

- ①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점
- ②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 ③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 ④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점

밑줄과 주변 맥락을 통한 목적 설계가 중요한 공백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이라는 밑줄에는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 1. 칼로릭 이론이란?
- 2. 이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란?
- 3.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 4. 카르노의 설명 중 무엇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가?

목적이 많으니 이를 적어놓고 지문을 읽다 보면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 1. 고온에서 저온으로 칼로릭 입자가 흐르며 이로 인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온도가 같아진다.
- 2. 고온의 열원에서 칼로릭을 흡수하여 저온의 외부에 이를 방출하며 일을 하는 열기관의 효율은 흡수 및 방출 온도 차에 의해 달라진다.
- 3. 일과 열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등가성을 지니며, 전환 시에 총량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그 양이 달라지면 안된다.

이를 바탕으로 네 번째 공백을 직접 채운다면 ‘형태가 전환되어도 에너지가 줄어들면 안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입각할 때, 칼로릭이 이동하는 두 온도 차에 의해 열효율이 유동적이라는 카르노의 이론은 열이 일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말이 안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말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칼로릭 이론에 기반한) 열기관이 한 일(=카르노의 열효율이 유동적이라는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26-30 세트 2문단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7번 문항)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밑줄과 주변 맥락을 통한 목적 설계가 중요한 공백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라는 밑줄에는 공백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1. 위임명령이란?
2. 이러한 제한이란? (앞 문장에 있겠죠?)
3. 위임명령의 효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마 개념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 세 가지 공백을 목적으로 지문 옆에 적어두고 읽다 보면 2문단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1. 위임명령은 국회가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 중 특정 내용의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제정된 것이다.
2.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유지하는 한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3.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기에 정당화되며,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정당화된다.

정리하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고, 어구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를 위임한 근거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가 문제의 답변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위임 안해준 범위에서)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10-13 세트 2문단, 5문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2문단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5문단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번 문항)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밑줄과 주변 맥락을 통한 목적 설계가 중요한 공백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밑줄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이 뭐고 그 취지는 무엇이길래 선정 기준이 되는가?

이를 목적으로 세우고 지문을 읽다 보면 2문단에서 유류분의 개념과 그 취지(목적)를 설명해 줍니다. 공백을 채운다면,

‘유류분은 기부를 안했다고 가정한 상속분의 절반(=개념)이며, 이는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인 기부가 없었을 시의 온전한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취지)이다.’

이를 담고 있는 정답은 ‘㉡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입니다.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8-11 세트 1문단, 2문단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1문단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2문단

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번 문항)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밑줄과 주변 맥락을 통한 목적 설계가 중요한 공백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져도 복원이 용이하다.’라는 밑줄 앞에 ‘따라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백을 앞 문장까지 포함하여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승인 과정이란 무엇이기에 일단 한 번 승인하면, 데이터를 복원할 때 다시 승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가?

따라서, 우리는 승인 과정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면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승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무엇일까’에 주목하면 되겠죠? 이를 목적으로 세우고 지문을 읽다 보면 1문단에서 바로 공백을 채워줍니다.

승인 과정은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여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노드(= 컴퓨터)들에 저장됩니다.** 모든 노드들에 이미 저장되었다는 것이 승인 과정의 특성이죠? 승인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블록체인은 컴퓨터들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승인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4-9 세트 (가) 3문단, (나) 1문단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3문단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라고 마찬가지이다.……………(나) 1문단

10.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번 문항)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밑줄과 주변 맥락을 통한 목적 설계가 중요한 공백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마찬가지이다.’라는 밑줄에 명시적 연결점인 ‘이는’이 있기에, 앞의 문장을 포함하여 공백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 문장에도 ‘보증 계약’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 문장의 보증 계약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공백을 규정합니다. 그렇게 세 문장을 통해 공백들을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상 계약은 뭐길래 보증 계약이 유상 계약이 아닌 거지?
- 2. 주채무자, 보증인, 채권자 사이의 관계는 뭐길래 유상 계약의 관점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도 마찬가지로 유상 계약이 아닌 거지?

이러한 공백을 목적으로 세우고 지문을 읽다 보면 (가)의 3문단과 (나)의 1문단에서 공백을 설명해줍니다.

- 1. 유상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 2.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래의 채무를 지는 사람, 보증인은 이를 대신 이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갑, 주채무자=을, 보증인=병’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보증 계약은 채권자 갑과 보증인 병 사이의 계약인데, 당사자 중 병만이 대가인 채무를 지므로 유상 계약의 개념 중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음.’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을과 보증인 병 사이에 대가 지급 계약이 체결되어도 주채무자 을은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 아니기에 유상 계약의 개념에 어긋나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약 내에서도 대가는 주채무자 을만이 지기에 이 계약 역시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음.’이라는 개념에 어긋납니다. 이를 담고 있는 답은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갑)가 아니기 때문이다.’